1986년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인 2026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 통합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 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경. 〈광주매일신문DB〉

"광주·전남 통합 시대 과제"…시기·방법 제각각

시·도지사 후보군 행정통합 입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단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통합 논의의 물꼬를 텄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곧바로 함께 하자며 화답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문'을 공동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행정 통합 문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통합 관련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총론 통합 공감대…각론 신속 vs 신중

민선 9기 통합 논의 진행엔 이견 없어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통합 드라이브

他 후보들 간 견해 엇갈리며 험로 예고

5개월여 앞둔 地選 최대 이슈로 급부상

〈광주시장 후보군〉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금이 적기"

▲강기정 광주시장=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다. 전남이 먼저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한 지금 시점에서 광주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5극 3특 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한 만큼 광주·전남에게는 큰 기회다. 국가사업 유치 과정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제는 RE100 산단 지정,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등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야 할 큰 과제들이 놓여 있다. 아무리 양보해도 2030년은 늦다고 생각한다. 4년 뒤나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 행정통합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법적 조건만 갖춰진다면 시·도민을 설득시키고 시·도가 서로 조정할 일은 그 다음이다.

"2030년 통합 목표 사회계약 제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며 논의와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에는 정밀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시·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여론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표는 무리가 있다. 광주·전남 통합의 원년을 2030년으로 설정한다. 2026년 선거 이후 차기 시·도지사가 임기 내에 통합을 완료하고 2030년 지방선거는 '통합 광주·전남'으로 치르자는 것이다. 로드맵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한데 모여 시·도민들께 '2030 통합 광주·전남'을 약속하는 일종의 '사회계약' 실행을 제안한다.

"6·3 地選 단일 광역단체장 선출해야"

▲정준호 국회의원=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을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인구와 일자리, 교육과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개별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경쟁이 어렵다.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결단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해야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일정과 같이 가야"

▲문인 광주 북구청장=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광주에는 축적된 기술력과 우수한 인재가 집적돼 있고 전남에는 풍부한 전력 자원과 저렴한 산업용지가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양 시·도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AI 모빌리티와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특별광역연합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 시점 역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일정과 같이 가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세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민선 9기 임기 내 행정통합 추진을"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충청권은 이미 메가시티를 형성하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전남도 더 이상 통합을 늦춰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은 역사·경제적으로 하나의 뿌리이며 양 시·도가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 통합과 문화적 연대를 넘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급격한 청년 인구 유출을 비롯해 인구 감소, 저소득 구조, 부채 증가 등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개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된 체제로 힘을 모으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물리적인 시간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 차기 시·도지사 임기 내에는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돼야 한다.

"시·도민 공감대 위한 신중 접근 필요"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경로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민 공감대 형성과 내부적인 검토 역시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적·행정적 절차가 허용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시기와 보조를 맞춰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행정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는 데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올해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행정통합 추진이 절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와 숙의 과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통합 필요…충분한 숙의 먼저"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동 추진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발전 과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의 전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다. 시·도민은 물론 실제 통합 과정의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 추진 시기와 관련,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 추진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질 통합 위해 일당 정치 탈피해야"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오래 전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해 왔으며 시대적 흐름상 통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선거 시기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작일 뿐이며 시기상조다. 민선 9기를 이끌 광주·전남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일당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포진하는 방향으로 정치 구조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소리만 강조하기보다 상대 진영은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와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전남지사 후보군〉

"정부 인센티브 약속…기회 놓치면 안돼"

▲김영록 전남지사=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광주·전남 대부흥'을 위해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통합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겠다. 강기정 시장이 행정통합 논의에 화답해준 것을 환영한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숙성된 의지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광주·전남이 각각 운영해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공동 구성해 시·도민과 함께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을 제안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이 갖춰질지 장담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언제나 하나였던 광주·전남, 40년간의 행정 경계를 허물고 대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시·도민들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현행법 내 최대한 신속 추진해야"

▲이개호 국회의원=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함께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야 한다. 현행법 내에서 추진단을 만들어 양 시·도가 절차를 차근차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시·도민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해 설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나 지역 발전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선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모색이 가장 시급하다.

"행정통합 중요…충분한 숙의 필요"

▲신정훈 국회의원=광주·전남 생활권·경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찬성한다. 다만, 통합에 따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도 있는 만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원칙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되, 통합의 시기나 과정, 절차는 조금 더 차분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행정·실무적 준비가 돼있지 않다.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사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할 일은 아니다.

"경쟁력 강화 위해 행정통합은 필수"

▲주철현 국회의원=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대전·충남까지 통합을 추진해 360만 인구를 가진 초광역도시로 덩치를 키워 경쟁력 있는 국가적 사업과 지역 발전 사업을 하는데 전남·광주가 각각 180·140만 인구로 쪼개져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가라고 독려하는 판국이다. 대선 공약이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허브, 광주는 AI 허브였으나 막상 AI 관련된 데이터센터나 국가AI컴퓨팅센터가 전남으로 왔다. 광주·전남을 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동의 하에 해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행정통합, 호남 자생 능력 입증할 것"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광주는 전남에 의해 이뤄진 도시로 경제, 문화, 정치 견해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 통합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가속될 것이다. 특히 청년이 많이 떠난 가운데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을 광역화하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광주는 교육 시설이 많고 전남은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대한민국의 아껴 놓은 땅이다. 전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전남·광주 한 지역의 노력 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행정통합이 시급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 군공항 이전 TF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청년을 오게 만들려면 광주·전남이 행정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고, 호남이 자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재정·변은진·양시원 기자

CMYK